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란 혐의' 윤석열 출국금지

(대통령)

공수처장, 국회 법사위원장
질의에 "출국금지 수사지휘"

법무부 "복수 신청 들어와
조금 전 출국금지 결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 등이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오동운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출국금지 관련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구호 외치는 전북 시장·군수들

고창군수, 김임준 군산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정현을 익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윤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전춘식 진안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9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학수 정읍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심덕섭 군수)

박군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요청건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장기간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군택 의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어떻게 납의 사건을 달라고 하는가. 해병대 사건은 1년이 넘었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그 사안은 이번 사건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운 민주당 의원도 "3년간의 경험을 볼 때 인력과 예산, 조직, 능력 이 없는데 이 사건을 가져다 사실상 뭉개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과견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그런 부분을 경찰과 협조해서 과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전날인 8일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비상계엄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尹 계엄령 후폭풍 도, 특별감찰 돌입

공직기강 확립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
합동감찰반 103명 투입
오늘 조사감찰 연찬회
특감 강화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도·시군 및 교육청 합동감찰반을 운영하며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그로 인한 탄핵 등 비상사국과 연달연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특별감찰은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 14개 시군 등 총 107개 자치감사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는 합동감찰반 103명을 투입해 도내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점검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철저한 감찰을 계획하고 있다.

특별감찰은 공직자의 복무 및 근무태세 점검, 품위 유지 여부, 도민 불만을 초래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감찰 기간 중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직위는 물론,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충모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은 "탄핵 등 정국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연달연시 분위기로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직자들이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엄정한 감찰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0일 도교육청 및 시군 감사담당관과 함께 조사감찰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민감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직사회가 도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특별감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고려인 이주 160주년... 이주·정착의 역사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해 9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특별공연 '아리랑 우리 아리랑'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연해주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 아리랑 예술단과 전주 판소리 합창단이 함께 무대를 꾸몄으며, 도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연해주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 관계자들이 전북을 방문한 계기로 마련됐다. 고려인 이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북과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이 행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됐다.

공연 당일 오전,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 교장이자 아리랑 예술단 단



9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특별공연 '아리랑 우리 아리랑'.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원광대 일원서 '아리랑 우리 아리랑' 특별공연 연해주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 아리랑 예술단 등 참여

장인 김 발레리아 씨와 일행은 전주 한옥마을을 탐방하며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오후에는 원광대학교에서 고려인의 초기 이주와 러시아 정착 과정,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120분간 이어진 본 공연은 △판소리 합창단의 '신사철가' △아리랑

예술단과 라두가 예술단의 계절을 주제로 한 공연 △판소리 △판소리와 아리랑 합동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아리랑과 부채춤 합동 공연은 한국과 러시아의 예술이 융합된 상징적인 무대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와 연해주 간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고, 고려인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다.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는 2019년 전북과 연해주 간 우호 교류 협약 이후 지속적으로 전북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단은 전북 공연 이후 국회에서도 두 번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광호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공연은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행사"라며,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고려인 사회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방법 |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 신분증 지참
 - 기탁서 작성
 - 기부(현금 또는 카드)
 -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인터넷 납부(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 기부자 인증 (거주지·한도 확인)
 - 기부금 결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 답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 답례품 배송 (배송지 선택, 배송내역 조회)

기부자 혜택 |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순창고추장, 장내미생물검사키트, 별초대행서비스 이용권 등

기부금 사용처 |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

기부문의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 063)650-1592